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585호 2019. 10. 15.(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462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463호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6
- 고창군 조례 제2464호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및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7
- 고창군 조례 제2465호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9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44호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11
- 고창군 규칙 제1145호 고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용규칙 전부개정규칙 14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464호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42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11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7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1316호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고창군 공고 제1319호	고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규칙안 입법예고	67
○ 고창군 공고 제1350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2
○ 고창군 공고 제1351호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추가모집	75
○ 고창군 공고 제1364호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4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462 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3. “노인 일자리”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6.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7. 공공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9.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0.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청년 일자리 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 창업지원 사업
3.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4. 청년 및 창업 정책 연구사업

5.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6. 청년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7.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운영

제8조(노인 일자리 지원)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
6.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제9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일자리 창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농어촌 식품과장, 상생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추천의원 1명
2. 기업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여성정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업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실적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9조(검사·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20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

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8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포상) 군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 등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463 호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464 호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음 해 지원기준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신축)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u></p>	<p>제3조(신축)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u></p>
<p>제7조(지원기준 등) ① <u>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1. <u>마을회관 : 신축 및 재·개축 6천만원 이내, 보수 2천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증축 3천만원 이내</u></p> <p>2. <u>마을모정 및 화장실 : 신축 및 재·개축 2천만원 이내, 보수 1천만원 이내</u></p> <p>3. <u>마을쉼터 : 신축 및 재·개축 1천만원 이내, 보수 5백만원 이내</u></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기준 등) ① <u>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익년도 지원기준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조례 제 2465 호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재배의 금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3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는 경우
 2.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종마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고창군의 친환경재배단지(무농약, 유기농)와 인접하여 친환경재배단지의 재배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업체·유통종사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규칙 제 1144 호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고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15일

고창군 규칙 제 1145 호

고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세목·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 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세원조사”란 정기 및 수시분 지방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과세자료에 누락되었거나, 부동산·시설물·자동차 등의 이와 유사한 과세대상 물건과 서류 등에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사·비교·정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서면·일반·특별·부분세무조사와 다른 별도의 일반적 세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군에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4.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 ·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과세자료 및 부과 · 징수 현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20건을 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같은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정보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세목·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인상을 수여받은 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같은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등에 의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세목·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까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업무담당자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이끌어 내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끌어 내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보여 주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오랫동안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준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끝나는 날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 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 정보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과세자료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돌려받아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 규정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은 따로 정한다. (규칙에 없고 따로 규정했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추징하였거나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 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 재정 분권과 공평과세 실현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선도자임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단정한 품행으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은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및 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에 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과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 대리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는 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내용의 의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사항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 아.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 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조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용, 조사진행 사항 내용에 대하여 통지전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부과·징수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세무조사 기타 사항 안내

- 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 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설명 또는 안내

[별지 제1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법인번호 : -

사업자번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고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 또는 영치합니다.

(압 수)

영 치 사 유

(압 수)

영 치 기 관

(압 수)

영치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입회인 등

소 속

성 명

서 명 날 인

거부 사유

20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예 치 증

법 인 명 (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방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 치 사 유						
예 치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20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①인

고 창 군 수

직 인

[별지 제5호서식]

(9-1)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관리현장 재증]

법인 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제조업 ()
○ 법인소재지 :		건설업 ()
○ 사업년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제 기)		판매업 ()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운송업 ()
	(전 화)	기 타 ()
○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고창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읍내리, 고창군청)

고창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 56428

※ 문의사항 전화 : (063) 560-2483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
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 원가 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고창군 납세자권리 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죄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4)

서식 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9-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도	시·군	구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	-----	---	-----	---------	----	---	------

(단위 : 원)

구분 월 별	① 소 특 세 납 부 액							② 산 지방소득세	기납부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고창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①a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③=①-②	②정당 세액 ④	기납부 세액 ⑤	납부 일	차인세액 ⑥=④-⑤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②					

(9-7)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고창군 소재 사업장) 작성 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9-8)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고창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 분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④소계														
	기본급														
	수당(시간외근무 직무·기술수당 등)														
	상여금														
② 비과세소득	기타														
	⑥소계														
	육아휴직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급여														
③ 종업원주 과세표준	기타														
	계														
	관리														
	생산														
과세표준 ㉔=㉔-㉔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㉔×(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수시														
	과세표준 ㉔=㉔-㉔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㉔×(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9-9)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고창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수당은 시간외근무, 직무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기타 각종 수당의 합계를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해당 월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㉔)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일

고창군 훈령 제464호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고창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행정감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및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제1호 중 “수수한” 을 “주거나 받은”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감사관으” 를 “부군수” 로, “고창군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전 관련 부서장으” 를 “감사관, 심의안전 관련 부서장으로 안전 발생 시 구성” 으로 한다.

제8조 중 “피감사 기관장” 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으로,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감사자” 를 각각 “감사대상자” 로, 같은 항 중 “첨부하여” 를 “붙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감사기관” 을 “감사대상기관” 으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를 “증거 자료를 갖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 를 “처분지시”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때” 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제13조 중 “아니” 를 “안”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관에” 를 “기관에게” 로, “동일한” 을 “같은” 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태만히 하여” 를 “게을리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손상하거” 를 “떨어뜨리거”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야기하거” 를 “일으키거” 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입증할만” 을 “증명할만” 으로,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를 “드러내 이를 알려야” 로 한다.

제18조 중 “처분기관에” 를 “처분기관에게”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안내

고창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명 성명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한다.</p> <p>②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고창군의 종합감사 부분감사·기강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고창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 규정 및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고창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 ----- -----.</p>		
<p>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면책“이란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감</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p>		

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행정감사 규정 및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의 징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고창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사 규정」-----

않은 -----

----- 않거나 -----

-----.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

----- 않는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신 설>

1. <신설>

2. <신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 5. (생략)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

-----.

1. ----- 주거나 받은 -----

2. ~ 5. (생략)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창군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 기관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 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

② -----
----- 부군수 -----
감사관,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면책제도 안내) -----
----- 감사대상기
관의 장 -----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 감사대상자 -----

-----.

② 감사대상자 -----

붙여 -----.

③ 감사대상기관 -----

증거 자료를 갖춰 -----
-----.

④ -----
----- 처분지시 -----

----- <단서 삭제>

제10조(면책심사 처리) -----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생략)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6. (생략)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생략)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군수가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지급한다.

② -----
----- 기관
에게 ----- 같은 -----
-----.

제16조(처분사유) -----
-----.

1. (현행과 같음)
2. ----- 게을리 하여 -----

3. (현행과 같음)
4. ----- 떨어뜨리거 -----

5. 6. (현행과 같음)
7. -----
----- 일으키거 -----

8. (현행과 같음)

제17조(처분권자) -----
-----.

----- 증명할만 ----- -- 드러
내 이를 알려야 -----.

제18조(처분방법) -----
----- 처분기관
에게 -----.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150px;">면책심사신청 안내</div> <p>고창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지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1. 신청권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li style="padding-left: 20px;">※ 감사를 받은 기관의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p>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p> <p>3. 적극행정 면책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익성</u>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u>타당성</u>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u>투명성</u>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p>※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150px;">면책심사신청 안내</div> <p>고창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지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1. 신청권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li style="padding-left: 20px;">※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p>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단서 삭제)</p> <p>3. 적극행정 면책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p>※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u>면책심사 신청서</u>						<u>면책심사 신청서</u>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신 청 인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심 사 대 상 자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감 사 명			감 사 연월일		감사자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감 사 지적사항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면책 심사 신청 사유	공익성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타당성					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투명성					4. 기 타			
소속기관의 장 책임자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명 성명</div>			
						고창군수 귀하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고창군 고시 제2019 - 11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와 체육청소년사업소(☎063-560-89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창 군 수

1.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운동장	체육 시설	공설 운동장	고창읍 월암리 326-1 일원	고창읍 월암리 316 일원	254,654	증)171	254,825	고창군 고시 제1998-146호 (1998.07.08.)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변경 기정:운동장 변경: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고창읍 월암리 326-1 일원 - 변경: 고창읍 월암리 316 일원 • 시설의 종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 공설운동장 •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정: 254,654㎡ - 변 경: 증)171㎡ - 변경후: 254,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성된 군계획시설(운동장)을 법 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 운동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행사 유치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위한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고자 군계획시설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 국토계획법 법률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운동장→체육시설)

○ 군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	주차장	고창읍 월암리 346 일원	14,741	감)155	14,581	고창군 고시 제 2015-13호 (2015.02.17.)	

○ 군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	주차장	◦ 면적 변경 기정 14,741㎡ 변경 감) 155㎡ 변경후 14,581㎡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내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주차장 면적 변경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세 부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54,654	증)171	254,825	100.0	
체육 시설 용지	운동 시설 용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축구장, 야구장, 미니골프장, 다목적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궁도장, 실내체육관,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97,740	증) 27,075	124,815	48.9	
건축 시설 용지	-	본부석동,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궁도장, 실내체육관, 실내야구장, 미니골프장 관리동, 화장실	-	15,220	감) 15,220	-	-	
공공 시설 용지	공공 시설 용지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보행자도로, 소공원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화장실	77,058	증) 2,671	79,729	31.4	
-	관리 시설 용지	-	창고, 테니스장사무실	-	증)735	735	0.3	
-	기타 시설 용지	-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	증)5,950	5,950	2.3	
녹지 용지	녹지 용지	복원녹지	복원녹지	64,636	감) 21,040	43,596	17.1	

※ 공설운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변경

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구성비 (%)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소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체육 시설 용지	합 계															
	1	주 경 기 장	1	주 경 기 장	계	254,654	증)171	254,825	100.0	15,430	감)440	14,990	21,280	증)960	22,240	본부석동,녹지(잔디구장) →주경기장 현황반영 현황반영

※ 건축면적 및 연면적 건축물대장 참고(2019.)

구 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시설 용지	소	16	도 로	23,243	증)2,326	25,569	10.0	-	-	-	-	-	-	현황반영
		15	주 차 장 (1)			4,280	1.7	-	-	-	-	-	-	
		16	주 차 장 (2)			2,600	1.0	-	-	-	-	-	-	
	17	17	주 차 장 (3)			2,590	1.0	-	-	-	-	-	-	
		18	주 차 장 (4)			3,696	1.5	-	-	-	-	-	-	
		19	주 차 장 (5)	30,561	증)1,260	7,122	2.8	-	-	-	-	-	-	현황반영
		20	주 차 장 (6)			3,754	1.5	-	-	-	-	-	-	
		21	주 차 장 (7)			1,467	0.6	-	-	-	-	-	-	
		22	주 차 장 (8)			1,880	0.7	-	-	-	-	-	-	
		23	주 차 장 (9)			4,432	1.7	-	-	-	-	-	-	
	18	진 입 광 장	24	진 입 광 장	10,260	감)1,715	3.4	-	-	-	-	-	-	현황반영
		19	보 행 자 도 로	11,934	-	11,934	4.7	-	-	-	-	-	-	
		20	소 공 원	1,060	-	1,060	0.4	-	-	-	-	-	-	
관린 시설 용지	소	27	화 장 실 (1)	-	증)95	95	0.1	-	증)90	90	-	증)90	90	
		28	화 장 실 (2)	-	증)305	305	0.1	-	증)110	110	-	증)110	110	
		29	화 장 실 (3)	-	증)200	200	0.1	-	증)100	100	-	증)100	100	
	소	30	화 장 실 (4)	-	증)200	200	0.1	-	증)100	100	-	증)100	100	
		31	창 고	-	증)440	440	0.2	-	증)200	200	-	증)200	200	금회추가(현황반영)
		32	테니스장사무실	-	증)295	295	0.1	-	증)60	60	-	증)60	60	금회추가(현황반영)
	소	33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34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청소년수련관, 식당 및 기숙사
		35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소	36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37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녹지 용지	소	38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39	청소년수련관 및 화장	-	증)5,950	5,950	2.3	-	증)2,100	2,100	-	증)5,200	5,20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건축물대장 참고(2019.)

2. 관련도서 : “계제생략”

고창군 공고 제2018-1048호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계획조례 반영으로 군민들에게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고창군 전반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1)의 이격거리 50% 완화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마.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3. 의견제출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전화 : 063-560-2563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담당자 전제민(전화:063-560-25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과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1)의 이격거리 50% 완화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마.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10. 01. ~ 2019. 10. 21)
- 라. 규제심사 : 예정

4. 따로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2016년”을 “2020년”으로 한다.

[별표 22] 중 제2호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6] 중 제1호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를 두고, 5년 이상 신청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발전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기준의 50%로 완화 적용하며, 제1호 사목의 경우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부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주소를 5년 이상 둔 경우 신청자가 토지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부부 및 직계 존비속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 하지 않아도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

[별표 26] 중 제1호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소비용을 위하여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건축법』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준공일부터 신청일까지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한 경우)

[별표 26] 중 제1호의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량농지내에는 발전시설(토지에 직접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을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6] 중 제1호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단,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2제2호나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략)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 ----- ----- -----2020년----- -----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관련)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가. 생략	2.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설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나. ----- 아목·자목· <u>너</u> 목 및 러목----- -----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의2 관련)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특정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 -----.
1. 발전시설 ¹⁾ 의 이격거리 ²⁾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발전시설 ¹⁾ 의 이격거리 ²⁾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위 가부터 사까지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아.----- ----- -----.
1)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를 두고, 5년 이상 신청토지를 소유한 자가 발전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기준의	1) ----- ----- ----- ----- -----

<p>50%로 완화 적용한다. (단, 제1호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2) (생 략)</p> <p>3)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u>경우</u>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u>않 으며</u>,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p> <p>4) 우량농지⁸⁾ 내에 <u>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u></p> <p>2. 폐차장¹⁰⁾ 및 고물상¹¹⁾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 마. (생 략)</p> <p>주)</p> <p>1) ~ 7) (생 략)</p> <p>8)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u>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u></p> <p>9) ~ 11) (생 략)</p>	<p>----- 하며, 제1호 사목의 경우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부지를 5년 이상 소유 하고 주소를 5년 이상 둔 경우 신청자가 토 지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부부 및 직계존 비속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 지 않아도 이격거리 기준 완화 적용)</p> <p>2) (현행과 같음)</p> <p>3)----- ----- <u>경우</u>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u>아니하며</u>, ----- ----- <u>다만,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준 공 일 부 터 신청일까지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u></p> <p>4) 우량농지⁸⁾ 내에는 <u>토지에 직접 설치하는 발전시설 및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판매 용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단, 건축 물 상부에 설치하는 판매용 발전시설의 경 우 제1호의 3)의 기준을 따른다.)</u></p> <p>2. 폐차장¹⁰⁾ 및 고물상¹¹⁾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 마. (현행과 같음)</p> <p>주)</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정비 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u> <u>(단,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제외한다).</u></p> <p>9) ~ 11) (현행과 같음)</p>
---	--

고창군 공고 제2019 - 1319호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자체감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창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징계시효 연장(2년⇒3년)을 반영하여 종합감사 주기를 조정하여 적극행정 유도 및 업무부담 경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정

2. 주요내용

- 가. 감사의 종류 및 감사 주기 변경 (안제4조제2항)
 - 감사주기 : 종합감사 2년 → 3년
- 나. 중복감사의 예외 사항 명시 (안제9조)
 -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다. 적극행정 면책 사항 신설 (안제28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5-700/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고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전화 063-560-2255 FAX 063-560-22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전화 063-560-2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명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고 창 군 수 귀 하</p>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 “군수”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수는 감사원 및 상급기간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와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를 “감사를 위하여”로, “다음의 사항을 요청”을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쳐야”를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문답서의 작성) 중 “피감사자”를 “감사대상자”로 한다.

제20조(표창) 중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한다.

제25조(조치결과의 보고)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앞에 “제6장 보고 등 기타”를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6장 보고 등 기타”를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u>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u>규칙에서</u> —————.
제3조(생 략)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6호 (생 략)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 —————. 제1호 ~ 제6호 (현행과 같음)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3년 ————— ————— —————
제5조(감사담당공무원) ①·② (생 략)	제5조(감사담당공무원) ①·②(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③ ————— <u>별지 제1호서식</u> —————.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군수는 감사원 및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공무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 제5호(생 략)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 <u>감사를 위하여</u> ————— ————— <u>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u> —————. 제1호 ~ 제5호(현행과 같음)

<p>② 제항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u>그쳐야 한다</u>.</p> <p>③ 제항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p> <p>제14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받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피감사자와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20조(표창)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이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5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보고 등 기타</u></p> <p>제28조·제29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_____ 그 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u> —.</p> <p>③〈삭 제〉</p> <p>제14조(문답서의 작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감사대상자</u> _____.</p> <p>제20조(표창) 군수는 <u>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u> <u>임직원</u>— _____ _____ _____.</p> <p>제25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_____ _____ 2개월 _____ _____ _____</p> <p>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u>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u> <u>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u> <u>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u>라도 일정 요건을 <u>충족한 경우</u>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p> <p>② <u>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u> <u>한 사항은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u> <u>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29조·제30조(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보고 등 기타</u></p>
--	--

고창군 공고 제2019 - 1350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2019년까지)와 전북도 및 농식품부의 유사한 일반회계사업 시행 및 낮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존치 필요성과 운용실효성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농업축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4층 농어촌식품과 유통팀(☎ 063-560-2534, FAX 063-560-2759)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bonogo@korea.kr)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유통팀(☎ 063-560-2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고 창 군 수 귀하</p>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창군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고창군 제2019 - 1351호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 10일

고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고창군 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2명	2019.10~17. 2019.12.31. (약 3개월)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등, 보수지급,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2. 응시자격 및 요건

○ 자격요건

- 가. 만 18세 이상 ~ 57세 미만
- 나.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고창군에 되어 있는 자
- 다. 운전면허증 소지 차량운행자
(주1회 이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 순회 가능한 자)
-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시험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병행 실시
 - 서류심사 : 임용예정 직위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면접심사 : 정신자세, 인성, 해당분야의 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선발일정

- 공 고 기 간 : 2019. 10. 10 ~ 10. 14.(5일간)
- 접 수 기 간 : 2019. 10. 10 ~ 10. 14.(5일간) 09:00~18:00
- ※ 주말제외
- 접 수 장 소 : 고창군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면 접 심 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합격자 결 정 : 서류심사(70점)+면접심사(30점) 후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16(수) 개별통보
- 근로계약체결 :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후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개인별 안내함.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 자격증 및 학위증 사본1부(자격증 원본 지참)
- ※ 응시원서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월 1,746,000원(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서 제5항에 의거 구직자(채용합격자는 제외)의 반환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기간 내에(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나. 반환청구 시 붙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직접방문 가능)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우편수수료)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다. 제출서류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시점까지 보관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실(☎063-560-2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고창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 접수번호			응시직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소		(전화) (H.P)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고등학교									
가 족 사 랑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장명		직 위		담당업무					
귀 군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인)												
고 창 군 수 귀하												

응 시 표	성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명	한자		응시직급	노인사회활동전담인력	
	주민등록번호		—			
	<div style="text-align: center;"> 2019년 월 일 고 창 군 수 </div>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주 소 :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자격면허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 기재
-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이 력 서

□ 인적사항

사 진 3.5cm×4.5cm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세)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현소속		직장명 및 부서 :		직위 :
병 역	군필여부			복무기간	
	최종계급			면제사유	

□ 학 력 (최고 학력까지)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명

□ 경력사항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 업무내용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 (년 월)			○ ○ ○

- ※ ① 근무한 모든 경력 기재하되, 재직(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② 경력(재직) 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기타 용지가 부족할 시는 추가로 작성가능(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상 훈

년 월 일			상 훈 내 용	수여기관

□ 기술 및 자격증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생년월일	19 . . (남, 여)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성격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작성요령 : 응모동기, 전공, 주요경력과 본인의 의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장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

2019. . . 작 성 자 : (인)

【서식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창군 공고 제2019 - 1364호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용차량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용차량의 차종별 배정대상을 추세에 맞게 조정하여 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유재산 가격평정시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정원”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재무과

(☎ 063-560-2480, Fax 560-250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 대비표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1 서식 중 부군수 전용차량의 차형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을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별표2 서식 중 차형별 대형승용차의 “1대(군수전용)”를 “2대(군수전용 1대, 부군수전용 1대)”로 하고 중형승용차의 “2대(부군수전용 1대, 업무용 1대)”를 “1대(업무용)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직근로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제4조 관련)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배기 량이 2,000cc 이 상의 차량을 말한 다)	○ 군수 ○ 군의회의장	(생략)
	중형승용차(배기 량이 1,600cc이 상 2,000cc미만 의 차량을 말한 다)	○ 부군수	
(이하 생략)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기준정수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기준정수	
---	--	--	--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1대 (<u>군수전 용</u>)	2대 (<u>부군수 전용 1대, 업무용1대</u>)	3대
	(이하생략)				

<신 설>

구 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또는 짙형 및 다목적 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	군본청	6대	2대 (<u>군수전용</u>) 1대, 부군수 전용 1대)	1대 (<u>업무용</u>)	3대
	(현행과 같음)				

제35조(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